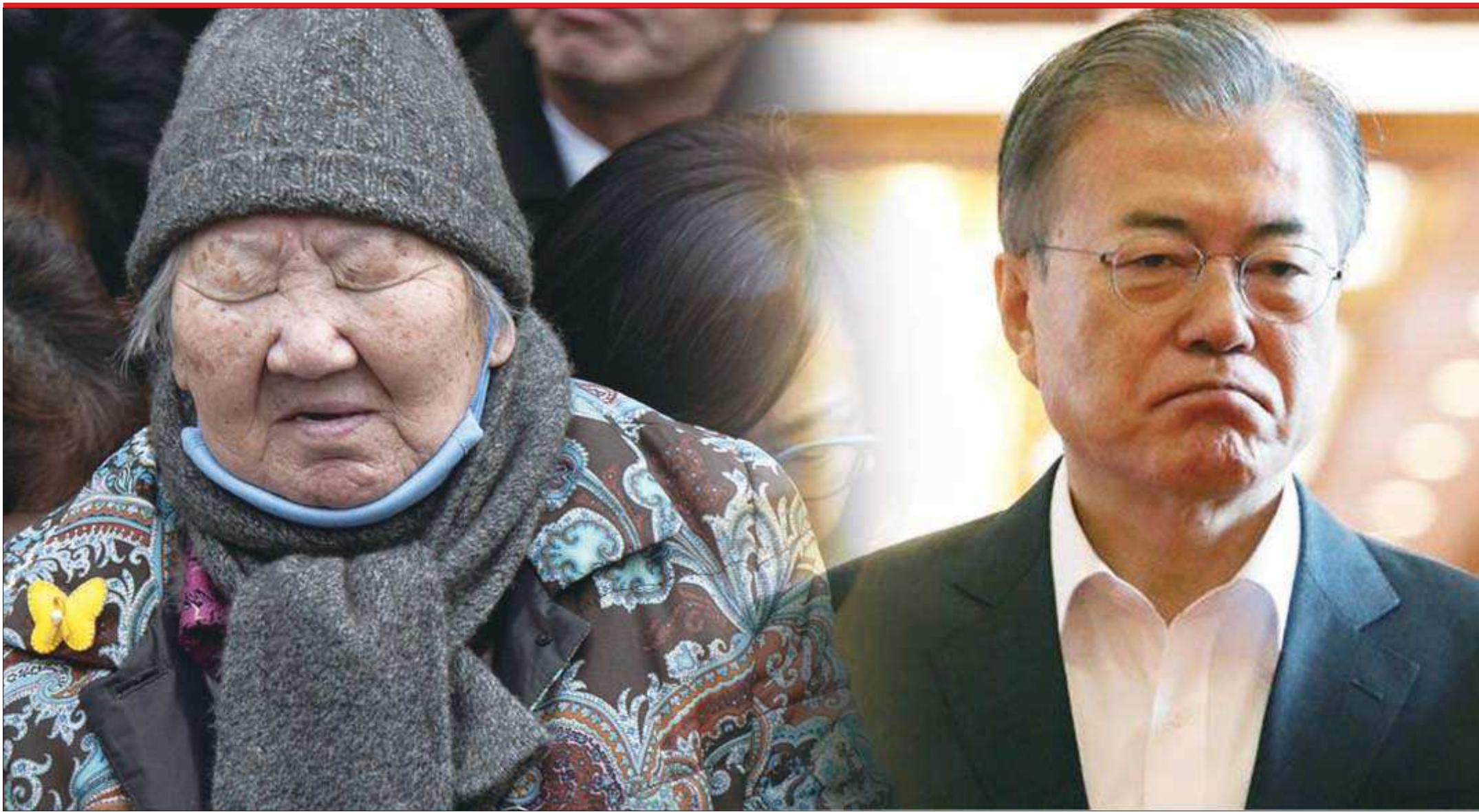




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 자산을 압류하라

관련 기사 6~7면

코로나19
서구 백신과
중국 백신

3, 9면

부산 주민투표 서명 20만명
주한미군 생물무기 시설
모두 폐쇄하라

5면

게임스탑 주가 급등락
월가에 맞선
개미들의 전쟁?

2면

미얀마
군부 쿠데타는
반동적
군사 반란

11면

국제
바이든: 차악도 악은 악 8면
폴란드 낙태권 시위 8면
러시아 나발니 석방 촉구 시위 9면

경제 실패 인정한 김정은
세계적 불황에서
자유롭지 못한
북한 경제

10면

건강보험
고객센터
파업

12면

게임스탑 주가 급등락

월가에 맞선 개미들의 전쟁? 아니면 또 다른 폭리 추구?

망해 가는 한 회사의 주식을 레딧[미국의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이용자들이 매수하면서 자본가들이 손해를 봤다. 지금은 다시 그 회사의 주식이 폭락했지만 여전히 이 사건은 많은 “동학 개미”와 “로빈후드 개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주식시장 도박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이사벨 링로즈**와 **사이먼 바스케터**는 주장한다.

레딧 이용자들이 지난주 월가에 전쟁을 선포했다. 이 “다윗과 골리앗” 전투에서 개미 투자자들은 월가의 전략으로 월가를 공격했다. 이들은 쓰러져 가는 회사 게임스탑의 주식을 매입했다.

그 결과 게임스탑 주가가 1700퍼센트 이상 올랐다.

미국 비디오 게임 소매업 체인인 게임스탑의 주가는 2013년 50달러대에서 2019년 5달러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올해에는 450개 매장이 폐쇄될 예정이었다.

헤지펀드들은 게임스탑의 주가가 급락할 것이라는 기대에 베풀었다.

이 펀드들은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빌린”다. 그리고 이를 즉시 팔고 나중에 더 싸게 되사서 그 차액을 챙기려 한다. 이를 공매도라고 한다.

그러나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게임스탑 주가가 급등했다. 일부 헤지펀드는 더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되사야 했고 이로 인해 주가가 더욱 상승했다.

개미 투자자?

1월 25일 월요일, 2시간 만에 게임스탑 주가가 145퍼센트 상승해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가 9번이나 중단됐다.

1월 27일, 게임스탑의 주가가 135퍼센트 올랐고 거래액은 296억 달러에 달했다.

헤지펀드인 멜빈 캐피털은 125억 달러 자산의 30퍼센트를 잃고 현재 다른

회사에게서 구제금융을 받고 있다.

자본가들이 한바탕 크게 잃은 것이다. 그렇다고 개미 투자자들이 영웅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게임스탑 투자를 최초로 시작한 레딧 이용자는 약 5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6000만 원]를 초기 비용으로 지출했다.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은 그럴 여유가 없다.

지독한 부자

이 사건은 남의 돈을 놓고 하는 투기와 도박으로 다른 누군가가 지독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줄 뿐이다. 그 투자자는 5000만 달러[약 557억 원]에 달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월가는 아마추어 투자자들이 시장을 “조작”했다며 분개한다. 그들은 체제를 조작하는 것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월마트가 자사주 매입에 지출한 돈의 절반을 노동자에게 돌리면 최저임금 노동자 100만 명의 임금을 50퍼센트 인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월마트는 주가를 높이는 데에 더 관심이 있다.

30일간의 냉각기 동안 게임스탑 거래를 중단시키자는 주장이 나왔다. 거대 헤지펀드들은 온라인 투자자들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끊임없이 주가 하락으로 도박을 한다.

헤지펀드들은 이제 복수를 원한다. 월가의 “합법” 기관을 보호할 시장 “규제”를 바란다.

주식시장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가져다주지 않는다. 미국 가계 상위 1퍼센트가 미국 주식 시장 자산의 53퍼센트를 소유하고 있고, 상위 10퍼센트가 93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다.

노동계급은 소수에게 이익이 되는 투자 세계와 맞서 싸워야 한다. 그들의 게임에 참가하는 방식으로는 금융 엘리트를 분쇄할 수 없다.



헤지펀드란 무엇인가

헤지펀드는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 최대 금융기관과 최상위 부유층의 공동 출자금이다.

헤지펀드의 명시적 목적은 금융시장의 일부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즉, 투자 손실의 “대비책”(hedge)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극도로 위험한 모

험을 일삼는다. 많은 헤지펀드가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거 투자한다.

선물 계약은 특정 시점에 특정 상품의 가격이 얼마가 될지를 놓고 벌이는 거액의 내기라 할 수 있다.

선물은 파생상품의 가장 간단한 예로, 그것의 가치는 더 단순한 다른 금

융 상품에서 “파생”된다.

기업들은 부채를 소유하고 이자를 징수하는 대신, 이를 한데 묶어 채권으로 판매한다.

그러면 다른 자들이 이 채권의 가격을 놓고 도박을 한다. 이는 무해한 활동이 아니다. 기근과 빈곤을 놓고 하는 도박이다.

주식시장: 자본가들의 카지노

은행 체계와 증권거래소는 자본가들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과 사용되지 않는 이윤을 투자할 곳을 제공한다. 자본가들은 끊임없이 돈을 굴린다. 어떤 자본가들은 나중의 투자를 위해 은행에 돈을 저축한다.

그러면 은행은 지금 당장 투자할 돈이 필요한 다른 자본가에게 이 돈을 빌려줄 수 있다.

기업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을 발행한다. 주식은 구매자에게 “배당금”을 약속한다. 이것은 투자 결과로 생기는 이익에 대한 몫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식 거래는 생산적 투자와 거의 관련이 없다.

뉴욕의 월가나 런던의 시티 같은 곳들은 자본가들의 거대한 카지노로 발

전했다.

여기에서 부자들은 주가나 통화 가격의 변동, 옅히고 쉼김 온갖 투자들을 놓고 투기를 벌일 수 있다.

지난 20년간 미국에서, 사람들이 민간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게 하는 기업공개로 조달된 돈은 총 6570억 달러다.

같은 기간 미국 500대 기업은 그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그것의 13배에 이르는 약 8조 달러를 들여서 자사주를 매입했다.

예컨대, 제약기업 머크는 연구 비용 때문에 의약품 가격을 높게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8년 머크는 연구개발에 98억 달러를 지출했지만, 자사주 매입과 배당

금에 140억 달러를 지출했다.

기업은 또한 자신의 불안정성에 베풀 수도 있다. 변동성지수(VIX)는 미국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투자자들은 이 지표가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를 놓고 엄청난 규모의 도박을 벌인다.

경주마에 판돈을 건다고 해서 그 말이 더 빨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활동들은 새로운 부를 창출하거나 생산을 확장하지 않는다.

이런 활동들은 이미 노동자들이 창출한 이윤을 가지고 하는 도박일 뿐이며, 궁극적으로 실물 경제의 건강에 달려 있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40호 번역 최병현

종부세 폭탄? 솜방망이 수준일 뿐, 집값 못 잡는다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며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3주택 이상 소유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포함)의 종부세 최고 세율을 1.2~6퍼센트로 올리는 안을 발표했다.

종부세 인상을 두고 정부·여당 인사들은 “역대급” 대책이라며 생색을 냈고, 보수 언론과 우파들은 “세금 폭탄”이라며 엄살을 떨었다.

그러나 종부세 인상에도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지난해 다주택자 수는 9만 명 이상 늘었다.

정부·여당 인사들의 생색이나 우파

들의 호들갑과는 달리 정부의 종부세 인상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7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률은 무려 62.3퍼센트에 이른다. 전국적으로도 상위 10퍼센트의 집값은 지난 1년 동안에만 1억 2000만 원이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를 기껏해야 1년에 수십~수백만 원 정도 더 걷는다고 투기 열풍이 잡힐 리 없다. 만약 다주택자가 30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지고 있다면 종부세가 수천만 원 오를 수도 있지만, 그 정도 고액의 집이라면 집값 상승으로 이미 종부세 인상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이익을 누렸을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다주택자 중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제공해 온 감세 혜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등록된 임대주택 157만 채와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 51만 채를 합한 약 210만 채는 대부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멍 송송

이번 종부세 인상안이 시행돼도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0.17퍼센트에 불과해, OECD 평균(0.33퍼센트)의 절반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종부세 인상안은 그야말로 구멍이 송송 뚫린 솜방망이에 불과한 것이다.

제대로 집값을 잡고, 노동자·서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려면 부자들에게 주는 감세 혜택을 폐지하고, 종부세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 또, 부자와 기업들에게 걷은 세금으로 값싸고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려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반대로 더욱 친시장적인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곧 새로운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용적률 상향, 규제 완화와 같은 시장주의적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은 “분양 아파

트를 중심”으로 공급하겠다고 노골적으로 공급 확대 방안을 거론했다.

정부는 2018년 기준으로 161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주택이 이미 투기 대상이 된 상황에서 분양 아파트 공급 정책은 투기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 정부는 투기를 잡겠다면서 실제로는 투기에 기름을 붓는 정책들을 지속·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고통은 계속될 것이고, 노동자·서민 대중의 환멸은 정부의 지지율을 더욱 끌어내리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정선영

코로나19

백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지배자들

장호중 의사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시기가 조금씩 미뤄지고 있다.

지난달에 정부는 이르면 설 연휴 전에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2월 2일 서울시는 이르면 이달 안에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첫 백신을 공급할 것으로 발표한 코백스 측이 1월 말까지도 언제 백신을 공급할지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코백스는 세계보건기구(WHO)와 민간 공동 백신 연구 기관인 가비(GAVI), 세피(CEPI)가 함께 결성한 기구로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공평하게 분배하자는 취지로 설립됐다. 각국 정부의 자발적 기여금을 재원으로 백신을 공동으로 구매한 뒤 부국과 빈국을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분배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코백스 측은 제약기업들과 백신 20억 개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2월부터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백신이 언제 얼마나 공급될지는 미지수다. 전 세계적으로 1억 개 이상의 백신이 접종된(2월 1일 기준) 지금까지도 코백스 측이 분배한 백신은 한 개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진국들이 코백스에 재정을 턱없이 부족하게 지원한데다 각국이 백신을 개발한 제약기업들과 경쟁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백신 공급을 선점했기 때문이다.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주요 백신 기업들과 자국 인구의 서너 갑절 되는 분량의 백신 공급을 계약해 세계적 공급 부족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만큼의 백신을 사용할 수는 없으니 사실상 제약기업들이 제시한 백신 값의 서너 배를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한 셈이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시장 논리에 따라 제약기업들은 생산량의 대부분을 선진국들에 보내고 있다. 지금 생산 속도대로라면 가장 가난한 나라들은 2년 뒤에야 백신을 구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신 개발 단계에서 이미 주요 선진국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재정 지원을 받은 제약기업들은 백신 개발 소식으로 주가가 크게 오른 바 있고, 이제 백신 판매 과정에서 또다시 어마어마한 이윤을 거둬들이고 있다.

미국 국립 알레르기·감염병 연구소, 영국 옥스퍼드 대학 등 공공기관들이 백신 개발에서 중요한 기여를 했지만, 이제 백신의 핵심 제조법은 제약기업들의 지적 '재산'이 됐다. 백신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기술 공개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다. 주요 선진국들은 팬데믹 상황에서 지적재산권을 무시하고 약품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자는 빈국 정부의 제안을 거부해 왔다.

백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 속에서 제약기업들의 이윤을 우선시하는 선진국 정부들의 정책은 백신 공급에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노인들에 대



한 아스트라제네카(이하 AZ) 백신 접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아스트라제네카(AZ)

1월 2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AZ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인정하며 사용을 승인했다.

AZ 백신을 포함해 현재 생산되는 백신은 **감염 자체를 막기보다는 병의 진행을 막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망자를 줄일 수는 있지만, 백신을 맞은 뒤에도 감염될 수 있고 증상은 없거나 약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위험도 여전히 있다는 뜻이다.

이는 백신 접종 순서를 정하는 데에도 적용돼야 한다. 단기간에 팬데믹을 끝내겠다는 헛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사망자 감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따라서 감염을 퍼뜨릴 위험이 큰 집단(경제활동연령층)에게 집중하기보다는, 고위험군(감염될 경우 죽을 위험이 큰 사람들)에게 우선 접종해야 한다. 고위험군에게 감염시킬 위험이 큰 집단(의료진 등)이 다음 순서일 것이다.

그런데 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유럽연합의 승인이 내려진 날 노인들에게 AZ 백신을 접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임상시험 참가자 중 노인의 수가 너무 적어,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이탈리아도 노인에게 접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가 며칠 뒤 입장을 번복했다.

백신 공급이 충분하다면 별 문제가 안 됐겠지만 지금처럼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가장 생산 속도가 빠른 백신을 노인들에게 접종할 수 없다고 하니 불안이 커졌다. 유럽에서 벌어진 논란은 전 세계로 확산됐고

한국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 식약처 자문단은 최근 AZ 백신을 노인에게 접종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AZ 백신의 경우 임상시험 참가자 중 노인의 수가 특히 적었던 것은 사실이다. 사실 고위험군 중 상당수는 백신 접종으로 부작용이 생기기 쉽거나 부작용이 치명적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그래서 노인, 아동, 이미 다른 병을 앓고 있는 환자, 면역기능저하자(HIV 감염인 등), 임신부 등은 임상시험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그 수를 최소화하는 경우가 많다. 백신의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인되면 접종 대상을 조금씩 넓혀가는 과정을 거친다. 코로나

백신의 경우 팬데믹의 긴급성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기 전에 사용을 시작했다.

다만 백신의 작동 방식이나 인간의 면역반응 등을 고려하면 젊은 사람에게서 효과를 보인 백신이 노인에게서만 아예 효과가 없을 것 같지는 않다. 백신이 승인된 영국과 인도 등에서 지금까지 심각한 단기 부작용이 보고되지는 않았다.

물론 지금 단계에서 AZ 백신을 당장 노인들에게 접종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인체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충분한 통계결과가 축적되기 전에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 정부가 노인 목숨을 진정으로 걱정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진 않아 보인다. 기존에 사용한 적이 없는 기술로 만든 백신이라 장기적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이 점은 화이자, 모더나 백신도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제약기업들과 국가들 사이의 경쟁이 더 중요한 선택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컨대 프랑스 마크롱 정부는 자국 기업인 사노피 사의 백신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유럽연합이 다른 기업들로부터 구입하려던 백신 계약 물량을 줄인 바 있다. 미국 FDA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경쟁 상대인 AZ 백신 승인을 미루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고 있다. 독일 메르켈 정부도 모더나 백신을 개발한 자국의 바이오테크 사의 이윤을 보호하는 한편, 유럽연합을 탈퇴한 영국을 견제하려는 것이다.(AZ 백신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 개발에 참여하고 영국과 먼저 공급 계약을 맺었다.)

노인사망자 감소보다 경제 활동 재개를 우선 순위로 두고 경제활동 인구에 백신 접종을 집중하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면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겠지만, 팬데믹 초기에 일부 지배자들이 취한 태도를 보면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다.

백신을 출시한 제약기업들은 자사 백신의 효과를 과장하고 후발 주자들의 진입을 견제하고 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실험실 연구 결과만을 갖고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하고 있다. 이런 기업들의 영향을 크게 받는 언론과 '전문가'들의 주장도 혼란을 키우고 있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럴수록 백신에 대한 신뢰도 점차 낮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팬데믹의 종식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스푸트니크V(러시아), 코로나백(중국), 코백신(인도)은?

제국주의 열강들 사이의 경쟁도 팬데믹 종식에 걸림돌이 돼 왔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자국 기업의 이익을 앞세워 백신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려 시도하는 것은 물론 경쟁자들의 앞길을 가로막으려는 시도도 계속돼 왔다.

유명 의학 저널인 <랜싯>은 2월 2일 러시아 가말레야 연구소가 개발한 '스푸트니크V' 백신의 임상시험(3상) 중간 평가 논문을 공개했다. 그 효과는 91.6퍼센트로 지금까지 개발된 백신들에 견줘 크게 뒤쳐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푸트니크V는 아스트라제네카 사의 백신과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었다.

물론 러시아 측이 임상시험을 마치기도 전에 일반인들에게 백신 접종을 시작한 것은 문제다.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미국계 의학 저널인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NEJM)에 논문을 실어 공신력을 얻은 반면, 러시아 측의 논문이 NEJM에 실리지 않고 유럽계 의학 저널인 <랜싯>에만 실린 것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경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시노백사가 개발한 백신 '코로나백'도 비슷한 상황이다. <랜싯>이 지난 11월에 공개한 논문을 보면 임상 2상에서 안전성과 효과가 어느

정도 증명돼 임상 3상 시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임상 3상 시험 중간결과는 혼란을 낳고 있다. 시노백 측은 임상 시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임상시험이 이뤄진 브라질, 인도네시아, 터키 정부가 발표한 임상시험 결과는 차이가 너무 커서 일반화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인도 정부도 임상시험을 건너뛰고 자체 개발한 백신 '코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인도가 제약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알려진 것이 너무 없어 그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부족한 대책 내놓고 등교 확대시키려는 정부

서지애 초등학교 교사, 전교조 조합원

문재인 정부가 등교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아, 초등 1~2학년 학생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를 허용하고, 소규모 학교(기준을 300명에서 400명 완화)나 특수학교(급) 학생은 2.5단계까지 가급적 등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방역·생활지도 지원 인력 5만 명을 배치하고, 학생수 30명을 초과하는 초등 1~3학년 과밀학급 2296곳에 기간제교사 2000명을 배치해 학급을 분반하거나 협력수업을 하겠다고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지난해 5~7월의 감염 자료를 토대로 등교 중지의 효과가 사실상 미미하고, 학교 내 감염이 소수에 그친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등교를 제한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이지, 학교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공간이어서가 아니다.

등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준비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과밀학급의 기준을 학급당 학생 30명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전교조가 교사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의 97퍼센트가 방역이 가능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라고 답했다.

정부가 내세운 거리두기 기준으로 따져 봐도 학급당 학생수를 훨씬 더 낮추어야 한다. 지난해 10월 강민정·이은주 의원 등도 정부의 학교 밀집도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교실 내 학생 수가 16명보다 많으면 학생 간 좌우·앞뒤 간격을 2미터



확진자 수가 한국보다 훨씬 많은 영국에서는 학교가 주요 감염원으로 밝혀진 바 있다

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20년 교육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 21.8명, 중학교 25.2명으로 OECD 평균(초등 21.1명, 중학교 23.3명)보다 높다. 특히 대도시들은 과밀학급이 훨씬 많은 게 현실이다.

그런데도 임시적 대책만 내놓으며 등교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들을 계속 출근시켜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온라인 수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너무 부족해 열악한 온라인 수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기도 하다.

한편, 이번 정부 정책에 따르면, 등교 수업 확대에 투입되는 기간제 교사 숫자(2000명)는 공립 초등 신규 임용 규모 3780~3880명의 절반에 이른다. 즉,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을 줄이려면 교사 2000명 이상을 더 임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더구나 방역이 가능한 교실 환경을 만들려면 더 많은 교사를 충원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를 빌미로 2018년 교사 감축을 기조로 하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안'을 발표한 것도 모자라, 2020년에는 초·중고 교사 단기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만 교사 1000여 명이 줄어든다고, 학급 300여 개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즉, 정부는 정규 교사는 줄이면서 그 자리를 비정규직 교사로 채우려는 알뜰한 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하듯이 팬데믹은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일이 앞으로도 자주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간제교사 양산이 아닌, 정규 교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한 밀집도가 높은 대규모 학교는 유휴 교실 찾기가 어려운 만큼 교실 증설도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교사노조연맹이 이번 기간제 교사 채용을 지지한 것은 그들의 협소한 시야를 보여 준다. 방역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에는 관심도 없는 문재인 정부의 임시적 조치를 지지하고 나선다면, 정부가 진지한 대책을 내놓도록 만들기 힘들다.

정부를 비판하고 학급과 교사 확충을 분명히 요구하며 투쟁해야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일도 가능하다.

입시 경쟁 그대로 두고

고교 무상교육만으로는 교육비 못 든다

김현옥 전교조 조합원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문재인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시행한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고교 2·3학년만 무상이었지만 올해부터 모든 고교생으로 확대되면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160만 원 절감된다고 한다(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결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 경기도는 2020년 4분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OECD 국가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였다. 2017년 기준으로 고교 학비 미납 학생이 약 1만 5000명에, 미납 금액은 66억 원에 달했다. 저소득층에게 교육비가 지원된다고는 하지만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여전히 많았던 것이다. 따라서 고교 무상교육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도 아니다. 2024년까지 정부와 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이 1조 원에 이르는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과거에도 중앙정부가 '누리과정'(만 3~5세의 취학 이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공통의 보육,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 예산을 교육청들에 떠넘겨 교육청들의 예산 부족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회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 부담"을 약속했지만, 2021년 교육부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2021년 교육부 소관 예산은 76조 4645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보다 9926억 원이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4월에 '2021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를 발표한 것은 취임 초 80퍼센트를 육박하던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2020년 총선을 겨냥한 지지율 만회 카드였다. 지금도 경제 위기와 개혁 배신으로 지지율이 추락한 상황에서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지지자들을 결집하는데 이용하고자 한다.

정부는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 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한다.

공수표

그러나 고등학생 교육비 부담의 진정한 주범은 입시 경쟁에서 비롯한 사교육비이다.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2만 1000원으로 2018년보다 10.4퍼센트나 증가했다. 특히 최근에는 사교육비 중에서 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36만 5000원으로 2018년부터 중학생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고교 무상교육의 효과가 무색하게

고등학생의 사교육비 부담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학 입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는 방증으로, 문재인 정부가 "교실혁명을 통해 공교육을 혁신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고 공약한 것이 공수표였음을 드러낸다. 공교육 내실화를 강조하며 학생 중심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고교학점제는 오히려 성적 경쟁과 입시에 유리한 교과목에 집중되는 현상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에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내놓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 방향은 수능 정시 전형을 30퍼센트 이상으로 확대하고 상대평가를 유지해 입시 경쟁 완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안이었다. 게다가 2019년 조국 사태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진 문재인 정부는 위기 탈출용으로 입시개혁 카드를 꺼냈지만, 정시 전형을 40퍼센트 이상으로 확대해 오히려 수능 경쟁이 더 치열해지도록 만들었다.

반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 고교 전환하겠다는 약속은 임기가 끝난 2025년으로 미뤘다.

문재인 정부는 '대학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학서열화 완화' 공약도 내놓았지만, 이제는 이 공약을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3년 반 동안 입시 경쟁 완화를 위한 개혁은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진작 시행됐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 교육재정 확충으로 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대학평준화 등으로 입시 경쟁을 완화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

교육 부문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은 계속돼 왔다. 교육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와 독립적으로 대학평준화와 입시 폐지,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대학 무상교육을 요구하며 투쟁해야 한다.

부산 주민투표 청원 20만 명

주한미군 생물무기 시설 모두 폐쇄하라

김영익

부산항의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요구 서명에 부산 시민 20만 명이 서명했다(2월 3일 현재). 주민투표 발의 요건인 유권자 5퍼센트(약 15만 명) 서명을 훌쩍 넘긴 것이다.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해 10월에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불과 4개월 만에 20만 명이 서명한 것을 보면, 미군 생물무기 시설에 대한 사람들의 반발과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은 분명하다.

발의 요건은 성사됐지만, 주민투표 실시는 가로막혔다. 앞서 부산시는 “행정안전부에 질의했더니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은 자치단체 사무가 아니라 국가 사무라서 주민투표 추진 요건이 맞지 않는다”며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거부했다. 주민투표의 법적 절차를 밟지 못하게, 부산시와 문재인 정부가 가로막은 것이다. 추진위는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미군 생물무기 시설 문제가 주민투표 대상일 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안전 사고가 벌어지면 부산 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 명백한데 말이다.

물론 부산항 생물무기 시설에서 취급해 온 보툴리눔 · 포도상구균 독소 이드 등은 매우 위험한 독소라서 조금만 유출돼도 전국적인 재앙이 벌어질 수 있는 “국가 사무”이다. 보툴리눔은 지구상 가장 강력한 독소로 단 1그램 만으로 10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 따라서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보툴리눔

주한미군이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실험과 훈련을 진행해 온 사실은 우연히 드러났다. 2015년 미국 더그웨이 기지에서 ‘실험용 죽은 탄저균’이 미국 내 시설과 한국의 오산 미군 공군기지를 비롯해 7개국에 배송됐다. 그런데 이 탄저균이 살아 있음이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심지어 이 탄저균 샘플은 민간 택배업체인 페덱스가 배송했다! 이 사고로 오산 미군기지에서만 22명이 탄저균에 노출됐다.

이 사고를 계기로 미군이 용산 기지와 오산 기지에서 실험실을 운영해 왔고, 2009~2014년에 탄저균 샘플을 15차례나 반입했다는 사실이 확



주한미군 생물무기 계획은 오래 전부터 계속 진행돼 왔다. 2016년 주피터 프로그램의 장비 성능을 점검하려고 모인 미 육군 산하 예지우드생화학센터 과학자들

인됐다. 탄저균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서 금지된 대량살상무기다. 10킬로그램이면 최대 60만 명이 살상될 정도로 위험하다.

미군은 한국에서 주피터(JUPITER)라는 생물무기 대응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미군은 이 프로그램이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비해 병원균 · 독성을 조기에 탐지하고 확인해 주한미군의 전투력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 즉 방어용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생물무기나 화학무기 문제에서 공격용과 방어용을 구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제독 실험에 사용되는 병원균과 독소가 바로 공격용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 탄저균 사고 이후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는 미군의 시험용 생화학 물질이 반입되지 않는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이었다.

2016년 부산항 8부두에 미군의 새 생물무기 실험실이 설치됐다. 주피터를 이은 센토(CENTAUR) 프로그램이 가동돼, 부산 · 군산 · 오산 · 평택 등지로 리신 · 보툴리눔 · 포도상구균 독소이드 등이 꾸준히 반입됐음이 지난해에 폭로됐다. 모두 생물무기 개발 실

험이 가능한 물질들이었다.

미군은 해당 시료들이 위험성이 없는, 즉 “사멸된 것(사균)”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적국의 생물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험을 사균으로만 진행한다는 해명을 누가 믿을까?

지금 미군은 한국에서 생물무기 실험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는커녕 더 확대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의 2021년도 회계연도 예산평가서에는 2020년에 센토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이를 통해 발전된 세균전 기술을 바탕으로 통합조기경보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지난해 바텔과 헌팅턴 엔젤스라는 미국 기업들이 이 프로그램들을 위해 부산, 대구, 진해, 서울 용산, 평택, 동두천 등지에서 일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채용 공고를 냈음도 폭로됐다.

센토

최근의 몇몇 폭로로 확인된 것은 미국이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쟁은 핵무기 말고도 생화학무기 같은 끔찍한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초래했다. 그리고 미국은 경쟁국들에 대한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고자 오래전부터 생화학무기를 개발하고, 심지어 이를 실전에서 사용한 전력이 있다.

미국은 1969년부터 생물무기 제조를 중단했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도 비밀리에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한다는 의심을 받았다. 예컨대 2003년 미국 《핵과학자협회보》는 당시 부시 정부가 세균무기 개발에 착수했다고 폭로했다. 탄저균, 페스트균, 보툴리누스균 등을 조종 · 변형 · 실험할 수 있는 연구소를 짓고 있다는 것이었다.

미군이 주한미군 시설에서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것은 중국과의 지정학적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주피터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시작된 것도 당시 오바마 정부가 추진한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과 관련 있다. 주피터 프로그램 책임자인 피터 이매뉴얼도 주피터 프로그램의 근거지를 한국에 둔 이유에 대해 “한국은 우방국으로 미국의 자산이 집중돼 있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하고 답했다.

미군이 부산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서 위험한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분노를 자아낸다. 2015년 탄저균 사고 당시 박근혜 정부는 실험 실태를 제대로 조사하려 하지도 않고 외려 미군을 두둔하기 바빴다. 이 문제에서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와 다르지 않았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생물무기 문제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왔다. 한 · 미 양국은 2011년부터 ‘한 · 미 생물방어연습’을 공동으로 실시해 왔다. 미국은 한 · 미 생물방어연습의 경험과 교훈을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전체에 적용하는 데 관심이 있다. 그리고 2013년 한국과 미국은 ‘생물무기 감시포털 구축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주한미군의 주피터 프로그램과 연계돼 있었다. 그리고 이런 협력을 통해 한국 정부는 생물무기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축적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는 미군의 위험한 실험장이 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군의 생물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을 일절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모든 생물무기 시설은 폐쇄돼야 한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종교동학교 ☐ 기타)

회비약정액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4909-2026, mail@workersolidarity.org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가능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구독기간 ☐ 1년 ☐ 2년 ☐ 2년 이상 ()년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6491-2792, ws@wspaper.org

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

일본 정부 자산 압류, 문재인 정부는 기피하고 있다

김승주

1월 8일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에게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오는 3월에는 같은 내용으로 이용수 할머니, 고 김복동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도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익히 예상되었듯이, 이 판결에 일본 정부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왜 남의 나라 주권에 이래라 저래라 하냐’는 민족주의적 논리(주권면제론)로 재판 자체를 부정해 왔다.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과 위안부 강제 동원에 책임 지지 않으려 하면서 패권적인 자기네 주권을 내세우다니 어처구니 없다.

법적 배상 기피하는 “외교적 해법”은 해법이 아니다

우선, 배상 판결의 의미부터 짚어 보자. 왜 꼭 법적 배상이어야 하느냐는 이야기들이 정부 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 외신기자가 배상을 집행해야 한다고 보냐고 묻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외교적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직후, 신임 주일대사 강창일도 이렇게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돈이 아니라 명예를 원한다. 그러므로 배상은 중요하지 않다. 배상금은 다른 기금을 마련해서 대체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방안을 따로 모색하자.”

그러나 애초에 법적 배상이 그저 다른 기금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었다면 피해자들이 한일 위안부 합의와 위로금 10억 엔을 거부하고 배상 소송을 진행했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한·일 간 갈등과 긴장을 푸는 푸는 일에만 골몰할 뿐,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사는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법적 배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데에는 이해할 만한 맥락이 있다.

이번 판결은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것이다. 이 소송을 걸기 전에 피해자들

은 1990년대 내내 일본 현지에서 배상과 공식 사죄를 청구하는 법정 투쟁을 벌였다. 1991년 8월 14일 첫 공개 증언으로 잘 알려진 고 김학순 할머니도 그중 한 분이셨다. 그러나 당시 일본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네 번의 소송을 다 기각했다.

이 재판이 진행되던 시기에 일본 정부는 일명 ‘고노 담화’(1993년)라는 것을 발표했다. 담화를 발표한 당시 관방장관 고노 요헤이의 이름을 딴 것인데, 이 담화는 일본 고위 관리로서는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의 존재를 인정하고, 강제성도 아주 제한되게 인정하는 내용이었다. 일본 정부는 이 담화에 따라 국민 성금 운동을 벌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할 위로금(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조성했다.

고노 담화는 지금껏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사과한 최대치라고도 볼 수 있다. 2015년, 당시 일본 총리 아베와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여기에 한참 못 미치는 내용이다.

문제는 그러한 고노 담화조차 결코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제대로 인정하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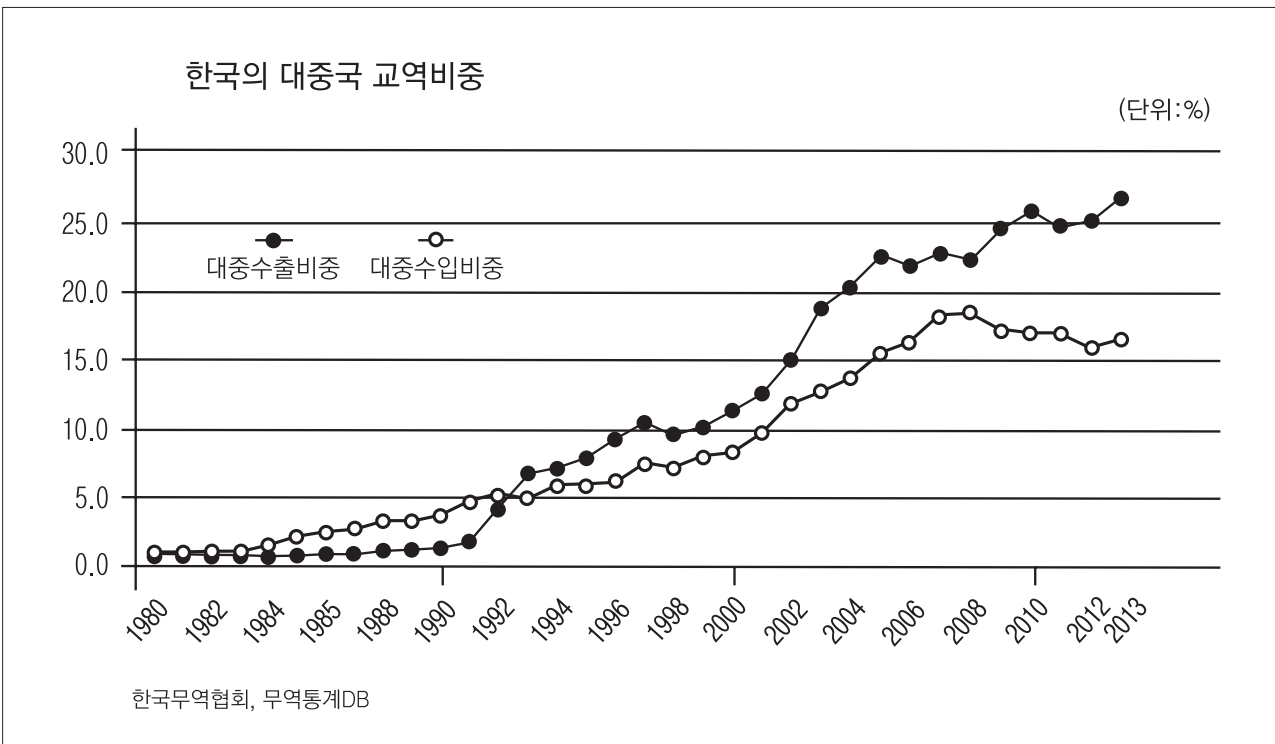
고노 담화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제국의 책임을 “군의 관여,” “일부 관현의 가담” 수준으로 표현했고, 강제성이 일부 있었다면서도 위안부 모집 과정의 강제성(강제 동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위안부 모집의 주체를 군이 아닌 “업체”로 규정하고 “본인 의사에 반한 사례가 많았다” 정도로 표현한 것이다.

이런 표현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가족들에 의해 떠밀리거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다는 등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 또 자진해서 위안부가 된 경우도 적잖았다는 주장의 여지를 남겼다.

고노 담화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에도 일본의 고위 관리들과 우익은 계속해서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고 “직업적 매춘이었다”는 등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망언을 일삼았다. 아베 자신이 한일 위안부 합의 직후에 “군과 관현에 의한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말한 바 있었다.

그리고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교수라는 자 하나가(존 마크 램피어, 1954년생) 위안부는 매춘이었다는 주장을 담은 논문을 얼마전 발표해, 일본 정부와 우익의 입장을 학술적으로 대변해 주고 있다.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인가? 바로 이런 이유로 피해자들은 법적 배상 과정을 통해, 일본 정부를 재판정에 세워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죄를 인정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다.



1990년대부터 한국의 대중국 교역 비중은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대일본 교역 비중(오른쪽 그래프)은 감소했다

위안부 피해자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위에서 지적했듯이, 문재인 정부는 이번 위안부 배상 판결을 전혀 환영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강제동원 판결 문제도 있는데 위안부 문제까지 겹쳐서 곤혹스럽다. 위안부 배상 판결을 강제동원처럼 강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배상 판결을 내린 법원을 압박하는 것인 동시에, 위안부 피해자들더러 ‘정부는 당신들의 편이 아니니 배상 강제집행을 청구하지 말라’는 압박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대로 지금 한·일 관계는 2018년 말에 있었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의 여파로 여전히 갈등을 겪고 있다. 당시에, 피고인 일본 전범 기업들(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은 배상을 거부하고 판결에 불복했다. 그러자 피해자들은 국내에 있는 그 기업들의 주식이나 특허권 등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해 달라는 청구소송을 뒤이어 제기했다. 이 압류·매각소송은 승인돼서 지금 법원 경매에 넘기기 직전까지 와 있다.

그러나 강제동원 배상은 판결 이후 2년이 훌쩍 넘는 지금까지 여전히 멈춰 있다.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한국 정부는 강제 집행을 하지 말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니, 지방법원(압류와 매각은 그 자산 소재지의 지방법원 소관이다)이 이런 국가간 갈등을 뛰어넘어 배상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강제 집행은 법원 소관이지만 결국은 한국 정부가 나서서 책임을 져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2년여 전 강제동원 배상 판결로 한·일 갈등이 커졌을 때 문재인 정부



2018년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실천에서는 아베 정권과 타협을 모색했던 문재인 정부

와 여당인 민주당은 “죽창가,” “한일전” 등을 운운하면서 애국주의적 포퓰리즘 정서를 국민 속에서 일으켰다.

그러나 말과 달리, 문재인 정부의 실천은 정말이지 보잘것없이 타협적이었다. 일본 정부에 맞서는 카드로 제시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말만 요란했지 아직까지 종료가 유예돼 있다. 한마디로 말해 아무것도 안 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장 문희상이 한·일 양국에서 기부금을 모아 배상금을 대신자는 꿈을 내놓아, 피해자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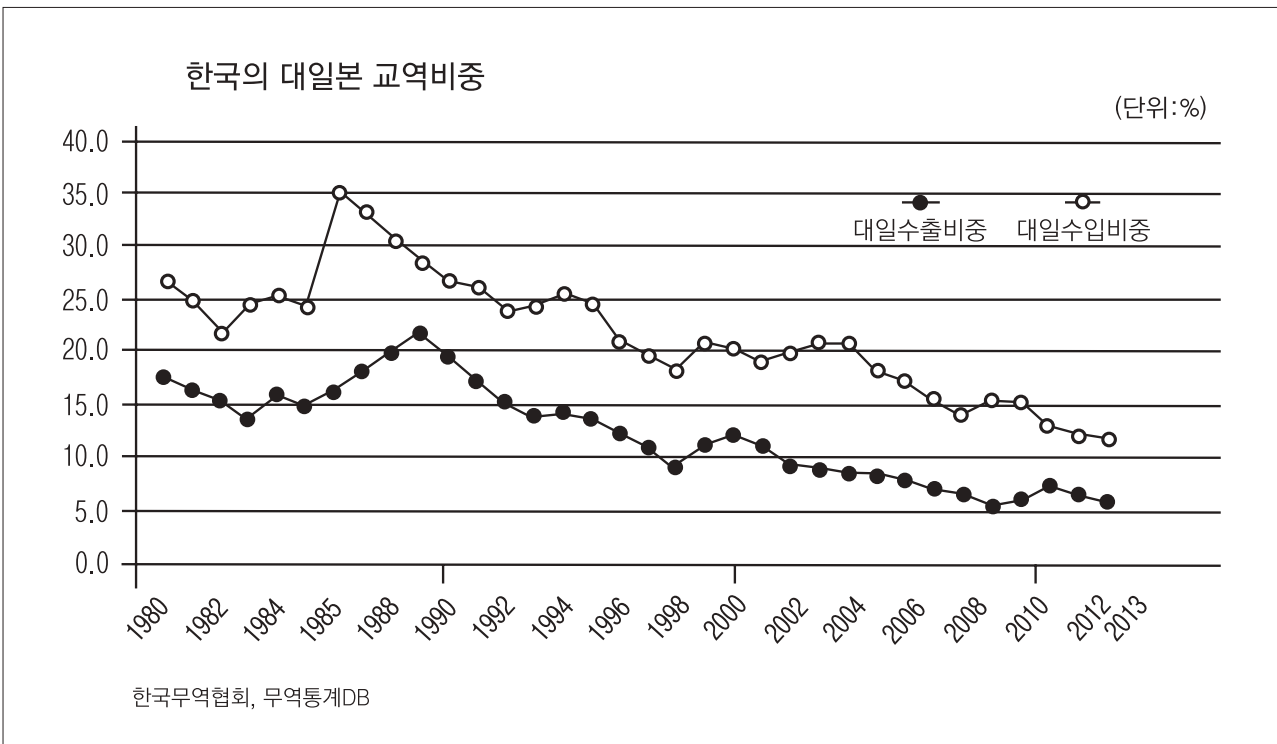
지금 정부는 오히려 일본 정부가 배상 재판에 불복해서 재판이 지연되는 걸 기회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왜 일본 정부에게 타협하고 마는 것일까? 사실 반일 제스처와 타협적인 대일관계를 왔다 갔다하는 행보는 본질적으로 역대 한국 정부에서 계속 반복돼 온 패턴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계승한다고 하는

과거 민주당 정부들도 마찬가지였다.

김대중 정부는 집권 직후 독도와 어업협정 문제로 잠깐, 2001년에는 일본 측 역사 교과서 왜곡 사건으로 대중의 공분이 일어났을 때 잠깐 일본과 충돌하는 듯했다. 하지만 실천에서는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훨씬 큰 강조점이 있었다. 그러한 기초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라 불리는 한·일 정상 공동선언(1998년)으로 표현됐는데, 이 선언은 1965년 박정희 정권이 체결한 한일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약속했다.

노무현 정부도 2000년대 초 역사 교과서 문제로 한·일 갈등을 벌였고 “외교 전쟁”을 운운했지만, 그 역시 잠깐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취임한 지 딱 한 달 뒤에 일본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배상 판결에서 최종 패소했는데도 이를 외면했고, 오히려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고 “임기 내 과거사는 공식 의제로 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위기를 느낀 일본 지배자들은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 지역에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군사 대국화에 박차를 가했다.

일본이 과거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이유

여·야를 가리지 않는 이런 패턴을 보면서, 일각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처지를, 또는 그러한 의식을 벗어나지 못한 게 아니냐고 한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과거 역사의 해석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과거의 전쟁범죄를 부정함으로써 오늘날 일본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러한 일본의 전략과 한국 국가의 관계는 무엇인지이다.

오늘날의 한·일 관계는 100년 전
이나 70년 전과는 달라졌고 역사적 변
천을 겪어 왔다. 그러한 변화는 양국간
관계를 넘어,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
후 세계 질서가 형성·유지·변동돼
온 더 큰 맥락 속에서 일어났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의 제국주의 질서는 전과는 다른 양상을 띄었다. 세계가 미·소 양대 진영으로 재편되는(심지어 억지로 편입된) 냉전기가 시작된 것이다.

1960년대 초 이후 미국 지배자들은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을 하나로 묶어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고자 했다. 특히 일본을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이자 잘 달래가며 묶어 두어야 할 파트너로 삼았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일본은 패전 이후 20여 년 만에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다시금 도약했다.

그러한 일본을 방어하는 일에 한국이 중요했다. 한국은 북한과 맞닿아 있는 대소련 전진기지였다. 한국도 미국과 일본의 하위 파트너로서 이 동맹 질서에 편입돼 성장했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진영의 중요한 일부로서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공유했다.

한·미·일은 경제적으로도 긴밀한 사이로 발전해 왔다. 특히 미국은 1960년대 초 이후, 막강한 경제력을 보유한 일본이 아시아 지역의 냉전 비용을 분담하기를 원했다. 일본도 그 과정에서 수출 통로를 마련하려 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 경제 개발 자금은 그 일환이었다. 당시 한일회담은 거의 미국이 제3의 당사국이라고 할 만큼 미국의 강력한 판여 속에서 이뤄졌다. 미국은 한·일 간 국교를 정상화해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를 확립하고자 했다.

이 합의 이후 한국의 핵심 산업들은 일본의 자금과 기술, 기계를 흡수해 성장했고,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크게 늘었다. 두 나라 정부와 기업 권력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도 긴밀해졌다. 한·일 국교 정상화는 이렇게 한·미·일 지배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이뤄졌던 것이다.

1990년 이후로는 세계 질서가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동구권(옛 소련 블록)이 붕괴한 것이다. 미국과 서유럽이 냉전의 승리자가 돼 세계적 패권을 과시했지만, 사실 곳곳에서 새로운 모순과 긴장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1990년대부터 중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2005년에는 경제 규모 5위를, 월스트리트발 세계 공황 직후인 201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에 올라섰다. 중국은 경제 성장에 걸맞게 군사력도 아주 빠르게 증강해 2011년에는 국방비도 미국을 뒤잇는 세계 2위에 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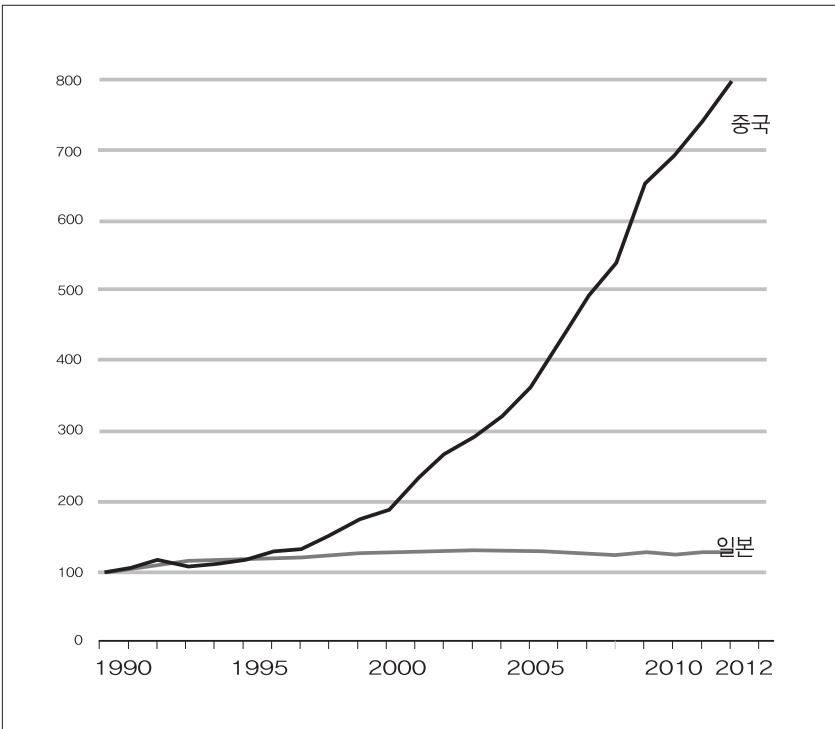
이는 독보적인 세계 패권국임을 과
시해 온 미국의 위상을 흔드는 동시에,

그때까지 아시아의 최강대국이던 일본의 위기감을 증폭시켰다. 특히, 중국이 급성장했던 시기에 일본은 반대로 경제 성장 추세가 멈추고 장기 불황에 빠져 있었다.

세계 체제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각국은 세계 시장에 진출해 있는 자국 기업의 이익을 궁극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힘, 즉 군사력을 갖추기 위해 애쓰고 경쟁한다. 이 경쟁에서 일정한 성공을 거둔 국가들이 제국주의 질서에서 앞자리를 차지한다. 일본도 그중 하나였다. 일본 정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미·일 군사 동맹을 다시 강화하고 본격적인 군사대국화 정책을 추진했다. 반전·반핵 정서가 강한 국내 반발을 무릅쓰고 (패전 직후 만든) 평화헌법을 개정해, 공격형 군대를 공공연하게 만들고자 했다(자위대라는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또, 일본은 대중국 견제에 저돌적으로 나서며 세력을 과시했는데, 다오위다오 또는 센카쿠 열도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중국과 서로 전투기를 발진시키며 위험을 고조시켰다.

이런 과정(제국주의에 조응하는)이 바로 일본 정부가 과거사가 이슈화되는 것 자체를 거북스러워하는 이유다. 그래서 집요하게 전쟁 범죄를 부정하며 망언, 왜곡, 은폐 등을 일삼는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침략 역사(“과거사”) 문제는 중국이 일본을 견제하고 아시아 주변국들을 포섭하는 데는 유리한 쟁점인 반면, 일본에게는 아시아 주변국들을 중국 포위 전략으로 끌어들이는 데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다.



1990년을 기준으로 본 중국과 일본의 군비 지출 증가율. 2000년대 중국의 군사력은 급격히 증강됐다

한국 정부의 친제국주의적 대외정책에 반대해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 지배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모순된 압력에 처했다. 일본 제국주의가 다시 부상하는 모습에 분노하는 한국 대중을 의식해, 일본과 미국이 어느 정도는 양보도 해 주길 바라며 줄다리하기기도 했고, 때로는 이것이 볼멘소리의 항의로 표현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에는 경제적·지정학적
으로 한·일 관계를 증진시켜, 더 근본
적으로는 한·미·일 동맹에 속함으
로써 얻을 수 있는 지배계급의 이익에
더 충실해 왔다.

다시 말해, 오늘날 한국 지배계급은 과거사 문제 해결을 번번이 가로막는 국제 질서에 이해관계를 가진, 그 구조의 일부다. 한국 지배자들은 일본이나 미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앞세우며 제국주의에 조응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외 전략을 언급했는데, 이 전략 추구에 북핵은 중요한 명분(위협)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국가의 군사력 증대와 한·미·일 동맹 강화의 압력이자 명분이 됐음은 물론이다.

그 시기의 핵심적 부분이 바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였다. 김대중 정부는 한·일 군사협력의 토대를 놓았고, 노무현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며 한국 방위뿐 아니라 중국과의 분쟁에도 개입할 수 있는 발진기지를 제공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계(MD 체계)의 일부가 될 제주 해군기지 신설을 결정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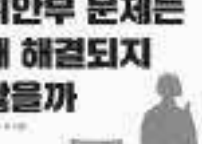
도 노무현 정부였다.

이후 박근혜 정부가 강행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조소미아)을 문제인 정부는 사드 배치로 완성시켰다. 문제인 정부의 군사비는 역대 최고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미국의 제국주의에 적극 협조하고 있기도 하다.

한·일 문제는 잠재적 폭탄이다. 박정희 같은 독재 정권도 독도를 폭파시키 버리고 싶다 했을 만큼, 또 박근혜 같은 강성우파 정부조차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지연시키려고 양승태 대법원과 재판 거래를 시도했을 만큼 곤란한 문제이다. 하물며 문재인 정부는 그러한 과거 정부들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며 등장하지 않았나? 게다가 2년 전에 (당시 개혁 배신과 조국 임명 등을 둘러싼 정치적 위기 탈출을 위해) 죽창가 운운하면서 항일 제스처를 취하며 만일 정서를 동원한 탓에 지금의 보잘것없는 실천이 더욱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다.

한국 국가(여아를 막론하고)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가로막아 온 국제 질서의 일부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또 국제기구나 국제법에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곳에서 문제인 정부에 맞서 반제국주의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국제주의이고, 반일 민족주의에 대한 진정으로 효과적인 대안이다.

당장에 배상 판결 문제는 계속해서 쟁점이 될 것이다. 이 배상 판결 집행을 시도하기는 커녕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것이 당장의 과제이다.



출간 예정 소책자

위안부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을까

김승주 외 지음, 노동자연대

예약 구입 문의: 02-2271-2395,
mail@workerssolidarity.org

바이든 — 차악도 악은 악이다

바이든은 자체 없이 새로운 전쟁 물이와 반(反)이민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닉 클라크와 소피 스카이어가 바이든의 대통령 임기 첫 정책 몇몇을 살펴본다.

1월 26일 미국 전략폭격기가 이란 부근 페르시아만 상공을 비행했다. 미군 병사들이 전쟁 준비 차원에서 새 기지로 파견될 예정이다.

1월 27일 미군 수뇌부는 성명을 발표해 이 비행 사실을 밝혔다. 바이든 취임 후 처음이다.

“미군은 잠재적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세계 어디에든 공중 전력을 투사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 주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무력 과시라는 것이다. 이란을 위협한 것이다.

이 비행에 앞서 바이든은 트럼프의 고강도 대(對)이란 제재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그 제재 때문에 평범한 이란인들의 처지는 끔찍하다.

1월 25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새 군사 기지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충돌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군을 위해 구축한 이 기지들은 이란과의 충돌에 이용될 수 있다.

바이든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버락 오바마가 이란과 맺은 “협정”에 복귀하고 싶다고 했다.

이는 트럼프와 단절하는 것이라고 찬양받았다. 트럼프는 이란 핵협정을 파기하고 새로운 제재를 부과했으며 전쟁 위협을 거듭했다.

그런데 바이든은 이란이 미국의 중동 통제에 굴복하지 않으면 협정 복귀는 없으리라고 한 것이다.

오바마가 맺은 핵협정대로라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고안된 조처를 이란이 받아들이면 미국은 대(對)이란 제재를 중단하기로

약속했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벌인 전쟁이 재앙을 낳자, 이란은 중동에서 세를 키웠고 미국의 이익을 위협했다.

원래 핵협정은 이란의 힘을 제약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중동 전역에서 이란의 영향력은 확대됐다. 미국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라크·시리아 이슬람 국가’(ISIS, 이하 아이시스)를 격퇴하려 이란의 힘을 빌려야 했다.

트럼프는 당선 후 이란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했고 전쟁 위협을 거듭했다. 트럼프는 이란에 맞서 미국의 동맹들을 규합하고자 했다.

아랍에미리트(UAE)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역내(域內) 동맹인 이스라엘과 협정을 맺을 때만 해도 트럼프의 방식이 성공한 듯 보였다.

하지만 서방 지배계급이 모두 이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이란과의 전쟁이 중동에서 자신들의 통제력을 더한층 훼손시킬까 우려했다. 그들에게 바이든은 “안정”으로 회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말이 트럼프가 한 일을 모두 폐기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중동의 평범한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겠다는 말도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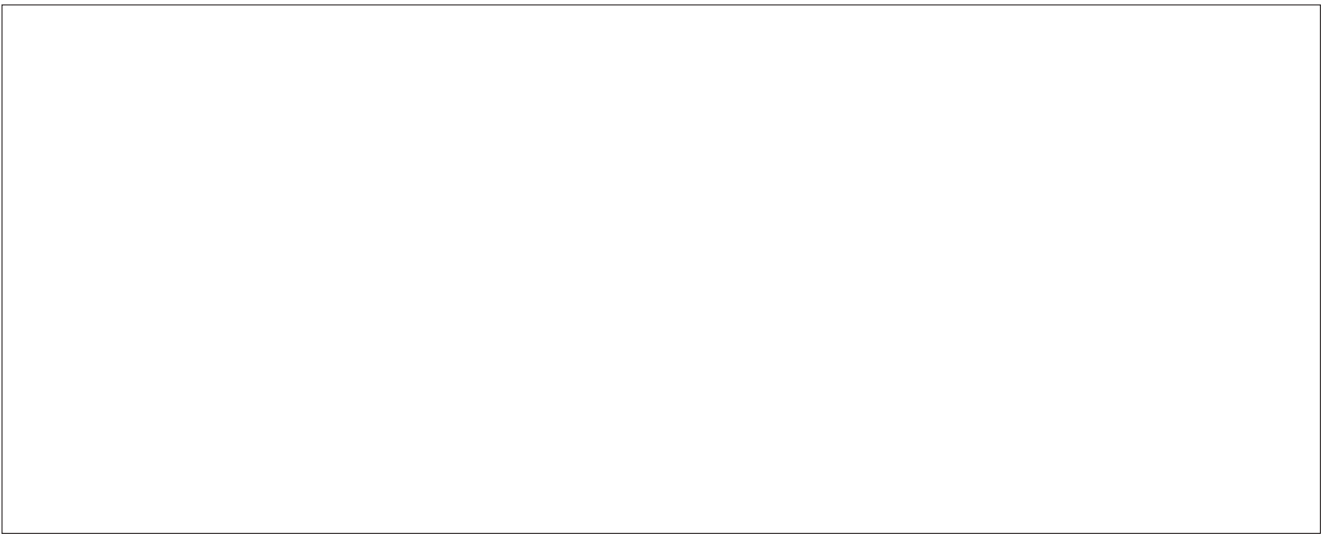
바이든은 트럼프하에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맺은 군사 동맹들을 활용하려고 한다.

그리고 1월 27일에 바이든의 국무 장관 앤터니 블링кен은 최소한 6월까지는 대(對)이란 제재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6월이 돼도,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에만 제재를 중단하는 것이다.

바이든은 ‘정상으로 회귀’를 들먹인다.

중동에서 이 말은 미국이 제재·위협·전쟁으로 자기 뜻을 관철한다는 뜻이다.

그 점에서, 바이든은 트럼프와 그다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 필요 없다. 복수를 원한다” 바이든의 이민자 정책이 벌써부터 항의에 직면했다. 1월 31일 폴란드 경찰과 전투를 벌인 ‘안티파’ 시위대

인종차별 반대 운동은 다짐한다

“우리를 거리에서 보게 될 것이다”

바이든에 맞선 시위가 시작됐다. 바이든의 이민자 정책이그 대상이 되고 있다.

1월 31일 ‘안티파’ 시위대 약 200명이 오레곤주(州) 포틀랜드에서 경찰과 전투를 벌였다.

시위대는 이민세관단속국(ICE) 건물과 민주당 당사를 파손했다.

시위대가 든 배너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바이든 필요 없다. 복수를 원한다.”

미국의 이주민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바이든의 공약에 활동가들이 의심을 품을 만하다.

바이든은 자신이 부통령이던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로 이주민 정책을 되돌리려 한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 8년은 이민자들에게 공포와 고통의 세월이었다. 이민자 가족은 생이별하고 이주 아동들이 연방 수용 시설에 감금됐다.

많은 사람들에게 오바마는 “최고 추방관”[미 대통령의 별칭인 “최고 사령관”에 빗댄 것]으로 기억될 것이다. 오바마 임기 동안 300만 명 넘게 강제 추방됐다.

이주민 권리 운동가 에리카 앤디올라는 이렇게 말했다. “바이든 정부가 오바

마 시절로 방침을 되돌린다면, 반드시 우리를 거리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취임 첫날 바이든은 트럼프가 시행한 인종차별적 이민자 정책 몇몇을 중단시킬 여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중에는 ‘무슬림 입국 금지’ 행정명령 철회, ‘이주 아동 추방 유예 행정명령’(DACA) 효력 재확인도 있었다.

바이든은 이미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8년짜리 “시민권 획득의 길” 정책을 펴겠다고 하고 100일 동안 강제추방 집행을 유예하려고 한다.

바이든은 트럼프 정부 시절 생이별한 이민자 가족을 상봉케 할 태스크포스 팀을 꾸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이든은 그가 오바마 정부 부통령이던 시절 생이별한 가족을 상봉케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활동가 너린 샤는 이렇게 말했다. “바이든이 트럼프의 결정만 되돌리고, 오바마 시절의 추방은 ‘큰 실수’였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신이 부통령이었을 때 생겼던 비극을 책임지고 고쳐 놔야 합니다. 당시

지역사회가 산산조각 났고 재정적으로 파탄 났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미국-멕시코 국경을 계속 강력히 통제하려 한다. 트럼프의 국경 장벽 건설은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면서 말이다.

2월에 중앙아메리카에서 출발한 이주민 수천 명이멕시코 국경으로 행렬을 지어 걸어왔다.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였다.

그중 한 명은 언론에 이렇게 말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고향에서 우리는 굶어 죽어요.”

과테말라 주재 미국 대사는 이렇게 대꾸했다. “바이든 정부하에서 코로나19 비상사태 기간 동안 국경 수비를 보강했다.

“미국 국경을 비정상적으로 넘는 이주민은 누구든 보건·안보상의 이유로 즉각 돌려보낼 것이다.”

1월 27일, 연방법원 판사 한 명이 바이든의 이주민 강제 추방 유예 행정명령의 효력을 14일 동안 정지시켰다.

바이든의 이주민 정책 몇몇이 벌써부터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40호 / 번역 김준호

폴란드

낙태권 투쟁이 다시 거리에서 벌어지다

아그니에슈카 칼레타
폴란드의 혁명적 좌파 단체 ‘노동자민주주의’ 활동가

폴란드에서 기본적인 낙태권을 위한 거리 전투가 다시 벌어졌다.

1월 27일, 우파가 장악한 헌법재판소가 내린 후안무치하고 잔인한 결정이 공시돼 효력이 생겼다.

이번 결정은 거의 전면적인 낙태 금지다. 태아가 심각한 기형이 있거나 살아날 확률이 거의 없어도 임신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런 억압적인 조처는 의사나 어느 누구라도 낙태 시술을 받으려는 여성에게 도움을 줄 엄두를 못 내게 한다.

이번 결정이 공시되기 며칠 전에는

한 남성이 자신과 만나는 여성에게 사후피임약을 살 돈을 줬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권리

1990년대 중반 이래로 폴란드 여성의 재생산권은 매우 형편없는 지경이 됐다. 국가와 가톨릭 교회가 손을 잡고 여성을 이등 시민으로 만들려 했다.

폴란드의 낙태 금지법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가혹하기로 손꼽힌다.

해마다 약 15만~20만 명의 여성이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나가거나 값비싼 불법 낙태 시술을 받는다.

게다가 이번에 발효된 이 가혹한 결정은 임신 여성을 상대로 한 고문과 다

름없다. 이는 우리의 권리가 결코 자동으로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 준다.

폴란드 전역의 크고 작은 도시에서 거리 시위가 다시 분출하고 있다. 또다시 우리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위한 전쟁의 최전선에 섰다.

1월 29일 시위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분노해] 바르샤바 거리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던 초창기 시위를 떠올리게 했다. 1월 29일은 그 시위가 시작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시위대는 “여성 몸은 여성의 것”, “혁명에는 자궁이 있다”, “너희는 살인자” 등이 쓰인 팻말을 들었다.

지난 석 달 간의 낙태권 운동은

2016년과 2018년의 운동보다도 크다. 이 두 해에는 정부의 낙태법 개혁 시도가 좌절됐다.

이제, 30년 전 집회가 합법화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극도로 보수적인 법과정의 당 정부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시위에서는 파시즘 반대 구호도 들린다. 많은 청년 사이에서 반(反)자본주의 주장이 인기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위의 저명한 지도자들이 노동조합들로 하여금 노동자들을 동원하고 일터 행동을 조직하도록 압박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시위가 투쟁의 전환점이 돼 가혹한 낙태 금지법이 곧 역사 속으로 사

라지길 바란다.

아일랜드 낙태권 운동의 승리와 최근 아르헨티나 소식[지난해 말 낙태가 엄격하게 금지된 아르헨티나에서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가 합법화됐다는 가혹한 낙태법으로 위협받는 모든 여성에게 희망을 줬다.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불리한 처지에 있는 여성들에게는 더 그렇다.

운동의 세는 약해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자유로운 낙태를 쟁취할 때까지 투쟁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40호 / 번역 강미령

다음 링크에서 시위 영상을 볼 수 있다.
fb.watch/3m7my6Ga0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백신 민족주의는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안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자 연대〉 편집부가 넣은 것이다.

우스운 측면을 걷어 내고 보면 유럽 연합의 백신 확보를 둘러싼 갈등은 현재제가 코로나19 팬데믹 대처에 무능함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 갈등은 그야말로 한 편의 소극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백신을 주문하는 데에서 굶뜨고 비효율적으로 움직여 놓고서는 나폴레옹의 대륙봉쇄령을 재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유럽연합 바깥으로 백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북아일랜드로도 수출을 금지하려 했는데, 이는 2019년 10월에 영국과 합의한 유명한 협약[“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에 관한 협약”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 협약에 따라 브렉시트 이후에도 북아일랜드 6개 주는 유럽단일시장에 남기로 했다.

[지난해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서] 유럽연합은 바로 그 협약의 일부 조항들을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이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강력히 비난한 바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우리를 비롯한 사람들이 주장한 바를 몸소 입증해



개발도상국들의 백신 보급이 막막한 가운데 선진국 정부들은 백신을 사재기하고 있다

줬다. 남·북 아일랜드 국경을 열어 놓겠다는 집행위원회의 요란스러운 약속은 결국 영국을 압박하기 위한 책략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소극

우스운 것은 이뿐이 아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에게, 먼저 계약을 맺은 영국보다 유럽연합과의 백신 공급 계약을 더 우선하라고 요구한다. 그 와중에 프랑스와 독일 정부는 가장 취약한 연령대인 65세 이상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유럽연합이 브렉시트를 대하는 태도에 깔린 추악한 속내가 드러나고 있다. 브렉시트에 극렬히 반대했던 〈파이낸셜 타임스〉 칼럼니스트 기디언 래크먼은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북아일랜드를 둘러싼 실수는 교정됐을지

몰라도 이미 많은 것을 들춰냈다. 근본적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영국 때문에 저러는 것이다. 사태가 더 지저분해질 수 있다.”

영국이 백신을 확보하고 보급하는 데에서 유럽연합보다 더 효율적이었던 탓에, 유럽연합에 견주면 존슨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참으로 대단한 일이다. 존슨이 팬데믹에 대처하는 데 실패해, 이번 주까지 공식적으로 10만 명이 영국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말이다.

백신 보급을 둘러싼 갈등은 정치경제학자 윌 데이비스가 말한 “백신 중상주의”의 표현이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유럽연합의 경우 이런 국가들의 카르텔)은 자국민에게 접종할 백신을 확보하려고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있다. 자유 시장을 지켜야 한다는 요란한 맹세는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고정 칼럼 “영업

비밀”에 실린 한 논평은 유럽연합이 이러는 것이 처음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팬데믹 초기에 유럽연합은 “블록 차원에서 개인보호장비 수출을 제한해 필수 재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했다. 유럽연합 시장 내부의 취약성이 대외 무역에도 지장을 초래한 것이다. … 유럽연합이 위기 시기에 내부의 공급과 수요를 관리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백신 중상주의는 국가와 거대 제약 회사의 동맹을 뜻한다. “영업 비밀” 논평을 또 인용하자면, “부유한 나라 정부들은 민관협력 모델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했다. 즉, 공공 구매 약속으로 수요를 확보하고 … 지적재산권을 대가로 제약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하게 했다. 옥스퍼드 대학은 처음에 자신이 개발한 백신의 저작권을 기증하려 했으나 여러 설득으로, 특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이

츠재단*의 설득으로 제약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 모든 것의 진정한 희생자는 서로 싸우는 유럽 국가들의 국민들이 아닐 것이다. 유럽연합조차도 올해 백신을 확보하긴 할 것이다. 진정한 희생자는 개발도상국에 사는 세계 인구의 다수일 것이다. 개발도상국 정부들은 가난한 탓에 거대 제약 기업과 계약을 맺을 수 없어서 코백스(COVAX)[백신 국제 공동 구매와 배분 프로젝트]를 통한 선진국의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처지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가 운영하는 이 프로젝트는 자금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부유한 나라의 정부들은 부와 권력을 이용해 백신을 필요보다 훨씬 많이 비축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 보도를 보면, 유럽연합은 모든 국민에게 접종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두 배나 많은 백신을 갖게 될 예정이다. 영국과 미국은 네 배, 캐나다는 여섯 배를 확보하게 될 예정이라고 한다. 백신의 51퍼센트를 세계 인구의 15퍼센트도 안 되는 나라들이 미리 차지해 버렸다.

이토록 끔찍한 부정의는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다. 전 세계에서 팬데믹이 오래 지속될수록 새로운 바이러스 변이가 선택되고 확산될 위험이 커질 것이다. 백신 중상주의는 우리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2740호 / 번역 이원웅

용어설명

게이츠재단

전 세계 질병과 빈곤 퇴치를 기치로 내세우며 빌 게이츠가 설립한 자선 재단

러시아 나발니 석방 촉구 시위

푸틴과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터져나오다

샘 오드

1월 31일 일요일, 러시아 전역의 도시 80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무장한 경찰에 굴하지 않고 시위를 벌이며 수감된 반정부 활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에게 지지를 표했다.

4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모스크바에 모여서 “나발니 석방”, “차르 타도” 등의 구호를 외쳤다.

러시아 당국은 지난주와 같은 시위가 재현되는 것을 막으려고 강경하게 대응했다.

그러자 시위대는 시위 진압 경찰에게 눈덩이를 던지고, 교통을 마비시키고, 경찰의 체포 시도를 싸워서 저지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 몇 년 동안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 반대하는 시위 중 가장 크다. 모스크바의 한 시위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모스크바는

마치 요새 같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모이지 않은 동안에는 우리를 막을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면 우리를 막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태평양 연안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시위대가 경찰에 의해 시위 장소에서 밀려난 이후에도 얼어붙은 아무르 만 위에서 “우리의 러시아가 감옥에 갇혀 있다!” 하고 외쳤다.

세상에서 가장 추운 도시 야쿠츠크에서도 영하 43도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이 2주차 시위에 모였다.

이날 러시아 전역에서 5000명이 넘게 체포됐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 경찰이 모스크바의 시위대를 진압하려고 최루가스와 테이저건을 동원했음을 알 수 있다.

나발니는 지난 1월 17일 독일에서

러시아로 귀국한 후 체포됐다. 그는 신경 작용제 중독으로 [독일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는 이 독살 시도가 러시아 당국의 소행이라고 주장한다.

나발니는 집행유예를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로 2월 2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발니는 푸틴 정부의 부패를 폭로해 왔다. 그는 최근에 공개한 한 영상에서, 올리가르히*가 흑해 연안에 푸틴을 위한 거대한 궁전을 짓기 위해 엄청난 돈을 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부패

유튜브에서 그 영상의 조회수가 1억 회가 넘었다. 그 후 푸틴은 그 궁전이 자기 소유임을 부인했고, 시위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나발니를 “테러리스트”에 비유했다.

하지만 나발니는 노동계급의 편이

아니다. 그는 민족주의자를 자처하며, 이민자를 적대하는 시각을 퍼뜨리기도 한다.

그는 신자유주의자이고 극우의 연례 행사인 “러시아 행진”의 공동 조직자이다. 이 행진은 파시스트, 유대인 혐오자, 무슬림 혐오자들을 불러 모은다.

하지만 그는 평범한 사람들의 공감대를 자극했다. 오늘날 러시아 상황이 절망적이기 때문이다.

몇 년간 불안한 고용 조건과 불평등이 계속되면서 푸틴 정부를 향한 울분은 이 광범하게 자라났다.

공식 통계를 보면, 지난해 실업자는 440만 명이었는데 이는 2019년보다 약 25퍼센트 늘어난 것이다. 이 중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전혀 받지 못한다.

코로나19는 러시아의 가장 취약한

계층한테 가장 큰 타격을 줬고, 가혹한 불평등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러시아 노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반정부 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나발니와는 완전히 다른 주도력에서 나와야 한다.

한편, 러시아 노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영국·미국·유럽연합의 책략을 경계해야 한다. 이들은 우선적으로 국가 폭력을 비난하면서 이득을 취하려 할 것이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2740호 / 번역 유나연

용어설명

올리가르히

구소련 붕괴 후 시장 자본주의로 전환하면서 막대한 부와 권력을 쥔 지배자 집단

경제 실패 인정한 김정은

세계적 불황에서 자유롭지 못한 북한 경제

김영익

최근 북한 경제의 상태가 나빠졌다는 분석이 많아지고 있다.

물론 북한 당국이 경제 관련 통계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관찰자들이 북한 경제의 상태를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북한 경제가 좋지 않다는 증거들이 있다.

첫째, 김정은의 발언이다. 지난해 10월 조선로동당 창건 열병식에서 김정은은 이렇게 말했다. “아직 노력과 정성이 부족하여 우리 인민들이 생활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열린 당대회에서도 김정은은 경제 성과가 목표에 많이 미달했다고 직접 시인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었습니다.”

둘째, 지난해 대중국 교역이 급감했다. 중국 당국의 통계를 보면, 중국과 북한 간 공식 교역은 거의 붕괴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북한 당국이 국경을 봉쇄한 탓이 크다. 그간 북·중 교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온 비공식 교역(밀수와 더불어 국제 대북 제재를 우회한 교역까지)도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이다.

셋째, 지난해부터 북한 정부가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듯하다. 북한 예산 수입 중 83퍼센트를 차지하는 거래 수입금(남한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함)과 국가기업이익금(남한의 법인세와 비슷함)의 지난해 증가율 전망치가 각각 1.1퍼센트, 1.2퍼센트에 불과했다. 제재가 한창 강화되던 2017~2019년에 견줘도 2분의 1 내지 3분의 1까지 급감한 수치다. 올해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된 예산 수입 계획은 지난해에 견줘 0.9퍼센트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는 김정은 집권 이후 가장 낮다. 김정은 집권 직후인 2012~2016년에 북한 정부 예산 수입은 매년 평균 5퍼센트 증가해 왔고, 2017~2019년에도 매년 3.3퍼센트씩 늘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이 신겨서 온 경제 프로젝트의 일부도 계획 달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 예컨대, 원산갈마관광지구는 김정은이 역점을 둔 건설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그러나 애초 2019년에 예정된 완공 시점이 지난해 4월로 연기됐지만, 2021년 2월 현재까지도 완공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김정은이 직접 독려한 평양종합병원 건설 사업도 지난해 10월이 목표 완공 시점이었는데 아직까지 완공되지 않은 듯하다.

교역 붕괴

북한 경제는 1950~60년대에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 “코리아의 기적”이라고 칭송받기도 했다. 북한 관료들은 국가자본주의적 축적 방식을 채택해 한 동안 성공을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이다.

흔히 국유화된 경제를 근거로 북한을 사회주의 사회라고 보지만, 국가는 언제나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적 일부다. 북한은 서방 시장 자본주의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사회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독립한 후발 국가들에서 국가가 자본 축적 과정을 주도한 경우가 많았는데, 건국 후 북한 관료들도 국가기구를 이용해 가용 자원을 중공업에 집중 투자해 자본을 축적했다.

북한 관료가 자본 축적에 열을 올리게 한 진정한 동력은 미국과 남한을 상대로 한 군사적·경제적 경쟁이었다. 그 논리는 바로 자본주의의 본질적 특징인 ‘축적을 위한 축적, 경쟁을 위한 경쟁’이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노동자들은 축적 경쟁에 종속되고 착취를 당했다.

그러나 북한 경제도 여느 서구 경제들과 마찬가지로 축적 노력 그 자체가 경제 위기를 부르는 경향을 피할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중공업 성장율이 떨어지자 북한에서는 소비를 희생시켜 투자를 확대하는 일이 반복됐고, 그럴수록 경제의 불균형은 심화됐다. 그리고 불황을 피하지도 못했다.

게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 세계 자본주의의 세계화 추세가 발전하면서, 이제 폐쇄적인 국가자본주의 방식은 점차 낡고 사태에 뒤처지는 것이 됐다.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 관료도 경제 성장 방식을 바꿀 필요를 느끼면서 여러 차례 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런 조심스런 경제 개혁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다.

1980년대에 이미 북한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1989~1991년 동구권 붕괴는 북한 경제에 치명타를 안겼다. 1990년대 북한은 최악의 위기를 겪어야 했고, 대규모 아사 사태까지 벌어졌다.

김정일은 서방과 관계를 개선해 경제 재건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이런 시도를 가로막았고, 북한은 대북 군사 위협과 제재에도 시달려야 했다.

화폐 개혁

김정은은 누적된 위기로 경제가 매우 취약해진 상태에서 권력을 물려받았다. 게다가 김정은 집권 전인 2009년 화폐 개혁이 실패해 북한은 단 기간에 엄청난 물가 앙등(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었다. 민심이 크게 동요했는데, 그 여파로 화폐 개혁 책임자인 박남기가 처형될 정도였다.

그래서 김정은 정부는 경제를 안정시키고 성장시키려고 애썼다. 이 과정에서 중국 등과의 교역이 크게 증가했다. 북한은 무연탄·철광석 등 지하자원 수출을 크게 늘렸고, 노동력의 해외 파견에도 열을 올렸다.

교역 증대와 해외에서의 송금 등으로 북한에 외화 반입이 늘어났다. 이렇게 되자 국내 거래에서도 달러 등의 외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2009년 화폐 개혁으로 북한 화폐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탓이었다. 김정은 정부는 이런 추세를 묵인해서라도 재정 수입을 늘리고 국내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려 한 듯하다.

김정은 정부는 국유기업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농업에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시장 지향적 조치도 일부 실시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경제는 한동안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 경제가 세계 자본주의의 리듬에 더욱 종속돼 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2017년 이후 미국이 북한의 교역에서 크게 증대된 부문들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제재 조치를 내리자, 북한 경제는 곤란한 처지에 빠졌다.

제재가 강화되자 북한은 우회로를 찾으려 애썼다. 대북 제재로 지하자원과 의류의 수출이 어려워지자, 같은 기간 북한에서 가발·시계 등의 임가공 수출이 증가한 것이 한 사례다.

그러나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은 북한 경제를 강하게 옥죄어 버렸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19가 국내로 유입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우려해 국경을 막았고, 국내에서도 지역 간 이동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북한 경제에 큰 충격을 준 듯하다.

교역 축소는 당장 공업 가동에 필요한 중간재 확보와 외화 반입을 어렵게 할 것이다. 중간재 확보 미비로 공장 가동이 어려워진 곳이나 수출 길이 막힌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처지도 곤궁에

빠졌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경제 위기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이 북한에서 한둘이 아닐 것이다.

북한 당국이 경제를 생각해 록다운(물리적 거리두기 강제 조치)을 푸는 것도 쉽지 않다. 지금까지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에드윈 살바도르 세계보건기구(WHO) 평양사무소장은 지난해 10월 말까지 북한에서 1만 2072명이나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았다고 했다(모두 음성 판정). 록다운을 쉽게 풀 상황이 아닌 것이다.

역대 북한 당국은 “우리식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 경제를 표방해 왔다. 지금 김정은 정부도 자력생산을 엄청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북한 경제가 세계경제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님을 보여 준다. 북한은 세계 자본주의의 경쟁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고, 북한 관료는 그에 반응해 선택해 왔다. 그리고 교역 증대로 북한은 더욱더 세계경제의 리듬에 종속돼 왔다. 팬데믹 위기는 바로 북한이 세계 자본주의의 일부임을, 그래서 세계적 보건·경제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 줬다.

최근 김정은은 조선로동당 제8자대회 등에서 경제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자본주의가 자본을 낳는다

더 읽으면 좋을 자료들

– ‘북한: 시장 개혁 전환이 쉽지 않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다’ (김영익, 본지 116호) ▶ <http://bit.ly/3oJhiRo>

– ‘[북한 권력 세습의 정치·경제적 배경과 전망] 3대 세습 북한은 어디로?’ (김하영, 《마르크스21》 8호, 전문공개) ▶ <http://bit.ly/39l2caw>

– 소책자 《북한 국가자본주의의 형성과 위기: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김하영, 59쪽, 3000원) | 구입처 링크 ▶ <http://bit.ly/2MnDRy2>



미얀마 군부 쿠데타는 반동적 군사 반란

김준효

이 글은 2월 1일자 기사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한다’를 대독 증보한 것이다.

2월 1일 미얀마(버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실권자 아웅산 수치 등 여당 민족민주동맹(NLD)의 주요 인사들을 구금하고 1년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지난해 11월 8일 총선으로 구성된 새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는 날에 맞춰 군사 쿠데타를 벌인 것이다.

군부는 당시 총선이 여당에 유리하게 조작됐다고 주장한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UEC)가 선출 의석 498석(상원 168석, 하원 330석) 중 22석(상원 7석, 하원 15석)에 해당하는 선거구에서 “치안 불안정”을 이유로 선거를 취소하고, 유권자 약 860만 명의 명부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후안무치한 주장이다. 해당 선거구에서 치안이 불안해진 것은, 군부와 군부가 후원하는 불교도 민병대가 로힝야족에 대한 “인종청소”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가 무더기로 취소된 서부 라카인주(卹)는 불교도 민병대와 로힝야족 저항 세력 사이의 교전이 가장 치열한 곳이다.

군부는 유권자 명부 조작의 증거도 전혀 대지 못했다.

군부가 미얀마 의회를 비민주적이라고 비난하는 것도 어처구니없다. 미얀마 상·하원 총 의석(각각 224석과 440석)의 25퍼센트인 166석(상원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후 국회의사당으로 가는 길목에 바리케이드를 쌓은 군대

56석, 하원 110석)이 선거 없이 군부에 할당된다.

군부

군부 독재가 종식되고 2015년 총선에서 민족민주동맹이 승리했지만, 군부는 권력을 놓지 않았다.

군부는 내무부·국방부·국경관리부 장관 등 정부 요직에 군 출신자만 임명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받았고, 개헌에 대한 거부권이나 ‘위기’ 상황에 자의적으로 개입할 권리도 확보했다.

또한 군부는 제1 교역국인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에 힘입어 경제적·사회

적으로도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했다.

군부는 미얀마 대중이 오랜 투쟁으로 쟁취한 제한적인 민주적 권리마저 되돌리려 호시탐탐 노려 왔다.

민족민주동맹은 군부 독재 종식 및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 덕에 집권했지만, 군부와 권력을 분점하며 ‘동거’했다.

민족민주동맹 정부는 서방의 투자와 교역을 늘려 미얀마 경제를 성장시키려 했다. 이는 미얀마와 중국의 관계를 벌리려는 미국의 입맛에 맞는 방향이기도 했다.

하지만 세계경제 불황 속에서 미얀마 경제도 2017년을 기점으로 둔화하

기 시작했다. 서방 투자는 줄어들었고, 교역에서 중국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

같은 시기 군부는 로힝야족을 또다시 학살했다. 로힝야족은 군부 독재가 시작된 1962년 이래 계속 박해받아 왔다.(관련 기사 본지 224호 ‘미얀마의 로힝야족 “인종청소”: 군부의 인종차별, 아웅산 수치의 외면, 미·중 제국주의의 위선이 낳은 비극’)

하지만 아웅산 수치와 민족민주동맹은 버마 민족주의를 표방하며 군부를 두둔했다. 아웅산 수치 자신이 2019년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에서 군부의 로힝야족 학살을 변호했다. 이 때

문에 군부가 기고만장해졌다.

민족민주동맹은 공식 정치에서 군부의 영향력을 줄이려 개헌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그런데 이 시도가 군부를 자극한 듯하다.

코로나19

코로나19 팬데믹은 미얀마에도 타격을 줬다. 특히 지난해 8월 이후 확진자 수가 치솟았다. 팬데믹은 경제에도 타격을 입혀, 가뜩이나 침체된 미얀마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섰다(세계은행 추산).

민족민주동맹 정부 지지율이 하락했다. 정부가 비판자들을 비민주적으로 탄압한다는 폭로도 심심찮게 나왔다.

그럼에도 이번 총선에서 민족민주동맹은 선거가 치러진 상·하원 476석 중 396석을 가져가며 다시 한번 다수당이 됐다. 반세기 가까이 대중을 잔혹하게 억압한 군부에 대한 반감이 워낙 심했기 때문인 듯하다. 군부가 지원하는 통합단결발전당(USDP)은 선거에서 33석밖에 얻지 못했다.

사회 불안 속에서 치러진 총선에서 군부 의석은 줄고 민족민주동맹이 재집권하자, 군부는 통제력을 키우기 위해 반동적 쿠데타에 나선 듯하다.

군부는 최소 1년간 국가비상사태를 유지하고 빨라야 2022년에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한다.

군부는 민주주의를 가혹하게 공격할 것이고, 로힝야족 탄압도 더한층 기승을 부릴 것이다.

주판알 튕기는 제국주의 국가들과 한국 정부

미얀마 군부 쿠데타 직후 바이트 정부는 두 차례나 성명을 내 구금자 즉각 석방과 총선 결과 존중을 촉구했다. 2월 2일 문재인 외교부도 미국과 거의 같은 표현을 사용해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 제국주의가 민주주의를 운운할 때는 오로지 그것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도움이 될 때뿐이다.

1962년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벌어져 군부 독재가 들어섰을 때, 미국은 이를 승인했다. 미국은 미얀마 군부가 “버마식 사회주의”를 주창하며 중국과 가까워지려 하자 그제서야 군부를 비난했다.

미국은 자신들에게 고분고분한 독재 정부가 자국 내에서 가혹한 학살과 탄압을 저질러도 감싸고 돌았던 오랜 역사가 있다.

2010년대 들어 미국은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했는데, 이는 인도양을 면한 미얀마와 관계를 다져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서였다.(이는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전략과 연관 있다. 관련 글: 김하영, ‘오늘의 제

국주의와 동아시아의 불안정’) 이 전략은 오늘날에도 유지되고 있다. 트럼프 4년을 거치며 미·중 갈등이 첨예해진 지금은 더욱 그렇다. 바이든이 민주주의 수호 운운하는 배경이다.

이를 감안하고 보면, 민주주의는 수사일 뿐이고 바이든 정부의 우선적 고려사항은 미얀마가 중국 쪽으로 완전히 돌아서지 않게 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의 전략·정보 웹사이트 <스트랫포>는 이렇게 지적했다. “미국은 미얀마와의 연계 유지를 우선시해 쿠데타에 실용주의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2014년 타이 군부 쿠데타 때도 미국은 … 타이에 대한 지원을 거의 위태롭게 하지 않는 선에서 비교적 최소한으로만 경제 제재를 부과했다.”

중국

중국 역시 지정학적 이유에서 미얀마를 중시한다. 중국한테 접경국 미얀마는 인도양 진출의 핵심 고두보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중국은 반세기 넘게 미얀마 군부를 후원하고, 민족민주동맹 정부와도 대규모 송유관·교량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은 이번 쿠데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사태가 중국에만 이롭게 흘러가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신을 압박하는 미국과 그 동맹들을 의식해야 한다.

그럼에도 군부의 집권이 중국에 득이 되리라는 관측이 있다. “중국의 최우선 고려 사항은 [인도양 진출을 위한] 인프라 사업 유지, 경제적 이득, 국경 안전 보장이다. 모두 미얀마 군부가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이다.”(<스트랫포>)

중국이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 학살을 “안보상 불가피한 일”이라며 사실상 두둔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로 여겨진다.(홍콩, 티벳, 신장·위구르 등지에서 봤듯이 중국 자신이 민주적 권리나 민족자결권을 혹독하게 억압하기도 한다.)

벵골만을 사이에 두고 미얀마와 마주한 인도도 이번 쿠데타를 주시하고 있다.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이 격해지고 있는 것뿐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의식하고 있을 것이다.

한국

한편, 문재인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존중”한다고 했다.

하지만 미얀마가 문제인과 한국 지배자들에 중요한 것은 한국 자본주의의 동남아 진출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

미얀마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신남방정책의 대상 중 하나다. 그 일환에서 문재인은 2019년에 미얀마를 방문해 아웅산 수치와 만난 자리에서 로힝야족 학살을 “국가 통합을 위한 노력”이라고 두둔해 왔고, 경제협력기금 10억 달러를 약속했다.

이미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한국 기업들이 미얀마에 진출했고, 군사 독재 정부에 포탄 제조 설비와 전략 물자 등을 수출하기도 했다(관련 기사 ‘버마 민주화보다 이윤이 우선인 한국 정부’).

타이 사회주의자 자일스 자이 웡파콘이 “국제 사회의 쿠데타 규탄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 것은 그래서 타당하다.

저항이 시작되는가?

군부 쿠데타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미얀마 대중이다. 미얀마인들은 1988년부터 지금까지 끈질기게 군부에 맞서 왔다.(관련 기사 ‘버마 민중 투쟁의 역사’)

이번에도 쿠데타 첫날부터 저항이 벌어졌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미얀마인들이 쿠데타를 규탄하고 구금자 석방을 요구하며 항의 행동을 벌였다. 주요 도시 의사들이 “정통성 없는 군사 정권 거부한다”며 3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로이터>).

또, 2월 2일에는 미얀마와 이웃한 타이에서 민주주의 투쟁을 벌이는 청년·노동자들이 타이 수도 방콕에서 미얀마 군부 규탄 시위를 벌였다. 타이 경찰은 이 시위를 폭력 진압했다. 자일스 자이 웡파콘은 “타이 독재와 미얀마 독재는 한통속”이라고 규탄했다.

웡파콘은 이렇게 지적했다. “버마 민주주의의 진정한 희망은 아웅산 수치나 서방에 있지 않다.

“아웅산 수치는 반쪽짜리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최소 5년, 아니 그보다 오래 군부와 협력

해 왔다. 뿐만 아니라, 군부에 맞선 ‘8888’ 항쟁* 때도 수치는 학생과 노동자들의 운동을 흠어뜨렸다. 수치는 인종차별주의자이고, 무슬림을 혐오하는 버마 민족주의자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의 지도자라고 믿을 수 없다.

“희망은 타이와 홍콩에서 영감을 받은 버마의 새 세대 청년들의 저항에 있다.”

☞ 용어설명

‘8888’ 항쟁

1988년 8월 8일 시작된 미얀마(당시 이름으로 버마) 청년·노동자들의 대규모 항쟁. 운동은 정부의 환율 조절 제도 변경으로 화폐가치가 폭락한 것을 규탄하며 시작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군부 독재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적 정치 시위로 변했다. 아웅산 수치는 이 운동의 지도적 인물로 명망을 높였지만 군부가 선거 실시를 약속한 후 운동을 자제시켰다. 이후 정권은 유혈낭자하게 반격했고, 수치 자신은 가택 연금됐다. 이듬해 총선에서, 군부에 대한 반감에 힘입어 수치의 정당은 압승했다. 하지만 군부는 권력을 이양하지 않았고, 이후 정권이 교체되기까지는 20여 년이 더 걸렸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파업 핵심 업무 떠받치는데도 직접고용 자격 없다?

이정원

2월 1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이 처우 개선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2019년에 노조를 결성하고 첫 파업이다. 노동자들은 95퍼센트로 파업을 가결했고 조합원 대다수가 열의 있게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

파업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높고 있다. 12개 공공부문 콜센터 노동조합을 비롯해, 진보, 노동 단체들의 연대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친사용자 언론들은 직접고용 요구에 대한 일부 청년들의 반발과 정규직 노조 집행부의 반대를 들며 제2의 '인국공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과하다는 투다.(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본지 329호 "인천공항 직접고용 논란 - 문제인의 미온적 개혁 때문이다"를 보시오.)

그러나 진실은 이와 다르다. 노동자들은 보험료 부과·징수 관련 업무, 의료 급여, 건강검진, 제 증명서, 장기요양 등 무려 1060종에 달하는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의 핵심 업무들로 공단 정규직 직원들의 업무와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그래서 건보공단도 고객센터 노동자들에게 사원번호를 부여하고 근태를 관리한다.

그런데도 건강보험공단은 2006년 비용 절감을 위해 고객센터 업무를 외주화해 민간기업에 업무를 위탁했다.

노동자들의 조건은 너무 열악하다. 8시간 근무 중 점심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단 1분의 휴식 시간도 없이 하루 평균 120건의 전화 상담을 받는다. 이렇게 고강도 노동을 하는데도 생리휴가나 연차 사용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해 왔다고 노동자들은 증언한다. 위탁업체 관리자들의 실적 압박은 악랄하기로 소문나 있다. "민원인과 통화를 마친 후 15초 이내에 다음 민원인과 통화를 시작하도록 강제할 정도였다."

최저임금 수준을 뺄 때는 저임금은 노동자들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다. 승진이나 다른 보상제도는 일절 없고 그저 기본급(최저임금)에 콜 받는 횟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게 다다.

"1년을 다녔든, 10년을 다녔든, 콜을 많이 받으면 [인센티브를 받고], 콜을 많이 못 받으면 최저임금을 받아요, 상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지켜라! 2월 1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파업 집회

담사의 50퍼센트 이상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어요."(김숙영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장)

그래서 노동자들은 임금을 늘리려면 '콜 수'를 더 올려야 하는 지독한 경쟁에 내몰려 왔다. 하루에 심지어 180콜을 처리하는 노동자도 있다.

이런 열악한 처우에도 노동자들은 코로나19 감염 대응 일선에서 헌신했다. 정작 자신들은 충분한 마스크 지급을 비롯해 감염 예방을 위한 환경을 제공받지도 못하면서 질병관리청의 콜센터 업무도 분담해 왔다.

진정한 표적

요컨대, 노동자들은 중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실을 하는데도 열악한 조건을 강요받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더 나은 보수와 처우를 보장받기 위해 직접고용을 요구할 자격이 충분하다.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된 것을 봐도, 지금 이 노동자들의 요구는 결코 지나치지 않다.

친사용자 언론들은 일부 청년과 정규직의 반대를 내세워 사실상 파업을 비난하지만, 이들의 진정한 속내는 다른 데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줄이고 정부·기관의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

고 우려하는 것이다. 저질 비정규직 일자리를 유지하고 정부·사용자 부담을 피하려는 반동적인 취지인 것이다.

이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취업 기회를 늘리는 것과도 상반된 방향이다. 친사용자 언론들이 청년실업을 걱정하는 양 말하는 것은 위선이다. 정규직화가 청년·노동자 개인의 노력과 능력, 경쟁의 룰을 무시한다고 비판하지만, 이는 코로나19로 더 치열해진 취업 경쟁에서 낙오하는 대다수 청년에게 구조가 아니라 스스로를 탓하라는 냉담한 메시지가기도 하다.

진정한 문제는 비정규직의 "과도한" 요구와 투쟁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약속 파기, 형편없는 개혁이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에게 한 정규직화 약속도, 청년층에게 했던 신규 일자리 창출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문재인은 말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하고는 정작 책임은 지지 않았다. 정규직화에 필요한 비용은 전혀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서 많은 수가 전환 제외됐고, 전환되더라도 자회사·무기계약직 같은 계결음으로 뒤를 엮었다. 전환자 처우도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등 20만 명에 이르는 민간위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는 기관들이 알아서 판단하라며 손을 떼 버렸다.

더구나 정부는 청년 고용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도 공공부문에서 단기 저질 일자리를 양산하는 정책만 반복하고 있다. 게다가 확대 재정에 따른 부담을 줄이려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에는 건축 운영을 압박해 정규직 신규 채용 증대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기업들도 신규 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공공기관 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박근혜 정부 때 악화된 조건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돌아온 건 호봉페 폐지 압박과 여전한 임금 억제였다. 건강보험공단의 경우만 봐도 임금에 대한 불만이 꽤 누적돼 왔다. 지난해 기재부가 공단 재정 악화를 이유로 구조조정을 주문하기도 해 노동자들의 불안이 커져 왔다. 결국 정부의 이런 책임 전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갈등을 부추기는 효과를 냈다.

이런 점을 볼 때, 청년들의 취업을 더 어렵게 만들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조건을 악화시키는 진정한 원인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니라 정부와 사용자들이다.

정규직 노조 집행부의 반대 유감

건강보험공단 사측은 정부 정책과 정규직 노조 집행부의 반대를 이유로

고객센터 노동자 직접고용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태도다. 고객센터노조가 참가하는 논의 테이블이라도 만들자는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다. 더구나 비정규직 파업에 정규직 직원들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해 파업 효과를 약화시키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에 연대하기는 커녕 사측의 책임 회피를 정당화해 주는 명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난해 정규직 노조 집행부는 조합원들 사이의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을 핑계 삼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대 회피의 책임을 조합원들에게 떠넘긴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절반가량이 참가한 조사 결과를 이유로 '고객센터 직접고용 추진 사업 중단'을 결정해 버렸다.

올해 들어 새로 들어선 집행부는 아예 선거 때부터 "조합원 동의 없는 고객센터 직접고용 반대" 공약을 내걸었고,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도 위원장은 그런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위원장의 뜻이 정규직 노동자(조합원) 전부의 뜻은 결코 아니다. 김숙영 고객센터지부장이 지적한 것처럼, 최근 노조 게시판에서 찬성과 반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만 봐도 노조 집행부의 입장이 전체 조합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정규직 노조 집행부의 직접고용 반대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해롭다.

그것은 정규직 노조를 공격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오히려 노조 조직력과 사기를 떨어뜨리기 십상이다. 친사용자 언론과 사측이 '노-노 갈등'을 부각해 지금은 비정규직을 비난하지만, 정규직이 임금 인상이나 조건 개선 같은 요구를 하고 나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정규직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쏟아낼 것이 뻔하다.

'비정규직을 외면한 정규직 노조'라는 비난으로 조합원들의 사기도 약화될 수 있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가 약화되면 정규직의 조건을 지키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이 파업을 지지하고 연대를 모으는 데 적극 나서는 것과 함께 건강보험공단노조 집행부가 직접고용 반대 입장을 철회하도록 설득하고 촉구해야 한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 집행부가 공공연하게 비정규직 연대를 해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방지해서는 안 된다.